

트럼프, 자동차 관세 폭탄 일단 보류

블룸버그 통신 보도

상무부 보고서 보완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일단 보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고위 관리들이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무부 보고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통상담당 보좌관과의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윌버 로스상무부 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히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참석했다.

의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수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올해 5월부터 조사해왔다. 이 연방 법률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관세를 받은 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하며 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날 상무부 보고서의 채택이 유예된 만큼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서질 결정한다.

상무부는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포함해 수입을 제한할 여러 조치를 권고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15일 안에 대책을 집행한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실현되면 매출과 일자리가 급감해 산업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우려한다.

작년에 미국이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의 규모는 3천500억 달러(약 396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및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자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역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 DC

를 방문한 세실리아 말름스트림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이 점을 강조했다.

말름스트림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올해 7월 합의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EU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대상이 EU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자동차 관세 면제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북미자유 무역협정(나프타)을 개정하면서 부수 합의서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으나 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제약을 받아들인 바 있다.



중국에 겨울철 난방이 시작된 가운데 14일 베이징에 스모그 황색 경보(세 번째 높은 단계)가 발령됐다. 이날 베이징에는 공기질지수(AQI)가 300에 육박하는 등 한 치 앞의 고층 건물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스모그가 깔렸다. /연합뉴스

중 베이징 이틀째 미세먼지 대란

안개 겹쳐 외곽 차량통행 차단

중국 베이징과 일부 지역이 스모그로 이틀째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중국환경관측센터에 따르면 베이징의 공기질은 오전 8시 현재 '심각한 오염'(5급)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27 $\mu\text{g}/\text{m}^3$ 이며 공기질지수(AQI)로는 277을 나타내고 있다.

베이징 일부 지역은 공기질지수가 300을 넘어 6개로 나뉜 공기질 등급 가운데 가장 나쁜 6급 수준이다.

베이징에는 이날 오전 짙은 안개까지 겹쳐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라 시 외곽인 6환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또한, 징타이, 징강아오, 징룬 등 13개 고속도로도 일부 구간도 봉쇄됐다.

베이징에는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대기오염 황색경보가 발령됐다. 이와 함께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허난성 등지까지 모두 25개 도시에서 심각한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졌다.

중국기상국은 대기 경보를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인 황색경보는 공기질지수가 하루 평균 200을 넘어서는 날이 이를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된다.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는 13~15일 베이징과 톈진시, 허베이성을 일컫는 징진지(京津冀)와 산시(山西)성 동부와 남부, 산둥(山東)성 서부, 허난(河南)성 북부와 산시(陝西)성 등의 일부 도시에서 심각한 오염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대기환경수석과학자 쯔파이는 이번주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 원인으로 바람이 잘 불지 않아 대기 확산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난방철이 시작된 것을 한 요인으로 꼽았다.

IMF "중동경제 유가 의존성 낮춰야"

걸프협력회의 6개국 올 경제 성장률 2.4% 전망

중동 경제가 올해 유가 상승에 힘입어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세계 경제에 리스크가 많고 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석유의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진단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발간한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MENAP)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2.4%, 내년 3%로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0.4%였다.

지난 2년간 국제유가가 60%가량 상승하면서 중동 산유국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지나해 1천180억달러(133조4천억원)에 달했던 중동 석유수출국들의 재정적자는 올해 410억달러, 내년 3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에 위협요인

이 많은 만큼 산유국들이 경제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가 MENAP 지역 전망을 어렵게 한다"면서 "여기에는 긴축적인 세계 금융환경, 세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MENAP 교역국들에 해를 끼칠 무역갈등의 고조, 지정학적 불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유국들은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 수입을 석유 수출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유가 변동이 극심해진 만큼 석유 의존도와 실업률을 낮추는 경제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IMF는 주문했다.

지하드 아주르 IMF 지역담당 국장은 중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최근의 유가 변동성은 이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재정개혁에 바탕을 둔 팽창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산불

시신 6구 추가 확인

사망 48명으로 늘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난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북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48명으로 늘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뷰트카운티의 코리 호네야 경찰총장은 이날 화재 감식·수색팀이 폐허가 된 파라다이스 지역에서 6명의 시신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산불로 인한 희생자는 총 48명으로 늘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단일 산불로 는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10구 안팎의 시신이 수습됐다.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280km 지점에서 일어난 '캠프파이어'는 발화 6일째인 이날까지 12만5천 에이커(505km²)의 산림과 시가지, 주택가를 태웠다.

불에 탄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km²)에 육박하고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4배에 달한다.

가옥과 건물은 7천600여 채가 전소하거나 붕괴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 목록에 오른 주민도 220여 명이다. 뷰트카운티 주민 5만2천여 명이 여전히 대피해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관계 기반 뒤엎어"... 日외무상 징용판결 관련 연일 도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14일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NHK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자위대 기발 문제, 국회의원의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방문 문제 등 미래지향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측에서 곧바로 적

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매우 험난해질 것"이라며 "제대로 대응해 줄 것으로 믿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험한 비난을 쏟아내는 등 한일관계를 책임지는 일본 외교수장의 역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3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4일), "어떤 나라든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꼭거이자 국

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이라는 등 도발을 연일 감행했다.

이에 지난 7일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양국 지자체의 교류나 문화·스포츠 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양국 국민의 교류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무안 일로읍, 토지 6000평, 15억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타운하우스 최적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몽탄~일로간 고속도로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15억(평당 25만원)

문의. 010-6834-7400